우암학원 창학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074호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음력 8월 2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교권보호 5법 시행' 1년… 여전한 교사들의 '참아내기'

'서이초 교사 사망' 계기로 제정
'학생 분리 조치' 활용사례 전무
교장 등 책임자 '민원대응' 미흡
교사 명예퇴직·교대생 자퇴 증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전모(29·여)씨는 최근 휴직계를 제출했다. 방학기간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2학기를 준비해야 했던 전씨는 끝내 학교로 돌아올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올해로 초등교사 2년차로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전씨는 지난 5월 받아쓰기 지도를 하면서 학생이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쳤다가 퇴근 후 학부모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 빗금이 아닌 별이나 다른 모양을 써도 되는데 교사가 그것조차 고려하지 않았냐'는 내용이었다.

또 아침에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일찍 출근하는 맞벌이 부모이니, 모닝콜을 해 아이를 깨워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전씨는 "이런 내용의 전화를 학부모로부터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많게는 2~3번씩 받다보니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 내가 계속 교직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휴직 이유를 밝혔다.

#전남에서 5년째 초등교사를 맡고있는 박모(35)씨가 바라본 교육현장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 차가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해 박씨는 수업 중에 교과서를 놓고 온 한 학생에게 교실 뒷편으로 가서 서 있으라고 지시했는데 그날 오후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생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수업이 시작됐음에도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었다가 수업이 끝난 뒤 돌려줬고, 그날도 어김없이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날이 갈수록 교사로서 교실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며 "과연 내가 이 교실에 필요한 존재인가 싶다"고 호소했다.

● "제도 마련됐지만 조치 어려워"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다며 분노와 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1일 통과시켰다.

교권보호 5법이 생기면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은 '학생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 것과 '민원대응팀'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교사가 판단할 경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아무런 변화나 개선 없이 '참아내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교사들은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 이를 적용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3일 광주·전남 지역 초등교사 10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들 모두 지난해부터 학생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활용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분리하면 학생을 어디로 보낼 지, 따로 나와있는 학생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도 없고, 분리 조치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후에 쏟아질 민원이 두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 교사 상대 흉기난동 속수무책

새롭게 생긴 민원대응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 대부분에 민원대응팀이 마련됐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민원에 대응할 새로운 인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업무를 하는 교사들로 꾸려진 팀이다 보니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장의 교사들은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을 두고 "여전히 교사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당시 해당 중학교의 책임자로 현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교장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대답만 내놨을 뿐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뒤에야 나타났고, 2시간여 동안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연서명을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9월 인사이동에서 전보발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 1일 해당 학교 교장이 발령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규정상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 2면에 계속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전남 쌀 수출 확대! 글로벌 도약 선포식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와 담양, 석곡 등 전남지역 조합장 등이 3일 담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전남 쌀 수출 확대!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갖고 전남 쌀 세계로! 미래로!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나건호 기자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尹 재가…"軍 사기진작·경제 활성화"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도 재가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격려,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관련기사 13면 서울=김선욱 기자

全南日報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십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만찬 후 강연 (18시 식사, 19시 강연)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